

대학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학구성원에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확산 및 경각심 제고
-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과 가해행동 재발방지 및 관계존중에 기반한 캠퍼스 문화 정립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고려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고의성, 피해 심각성, 낮은 피해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필요

대학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01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 엄정조치

피해자 의견청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엄정한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

피
해
자

대학 인권센터 등 교내외 전문기관과
연계 수사·삭제, 심리상담·의료·법률
등 신속지원

가
해
자

성고충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심의 시

온정적
조치 ✕

엄정
조치 ○

02 가해자 특별교육 부과

디지털성범죄는 특히 재범률이 높아 가해행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상습화하지
않도록 대학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가해자 대상 **특별교육 이수조치 의무화 필요**

※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11.6.)」에도 가해자 징계 엄정조치 및 특별교육 부과 반영

03 대학별 익명소통앱 모니터링

익명으로 운영되는 **대학별 정보공유 및 소통앱**(예 : 에브리타임),
학생 단체대화방을 중심으로 성희롱 표현 및 2차피해 빈번 발생
하나 별다른 규제장치 없음

모니터링 강화

※ 범정부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에브리타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책무성 강화 건의 예정('25. 2)

딥페이크 성범죄,
함께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 신체, 목소리를 가짜 콘텐츠에 합성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합성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것도 범죄행위에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더 이상 허위영상물이 아닙니다.
실제 영상물과 동일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관련법의 개정·신설(2024.10.16.시행)로 처벌강화

?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가짜니까 괜찮다?

!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은 가짜가 아닌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보기만 하는 건 괜찮다?

!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보거나 소지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호기심, 재미나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딥페이크 성적영상물,
난 안 잡힐 거야!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탐지, 추적하는 기술이 사진 한 장으로
가해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반드시 잡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해자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었습니다.

수사와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수사기관의 위장수사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 게시중단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딥페이크 성적합성물 ‘제작·유통’
불법촬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불법촬영물에 비해 낮은 처벌 수준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 원

개정

불법촬영물과 동일수준으로 상향

성폭력특별법 개정

징역
최대 7년

벌금
최대 5천만 원

‘유포할 목적이 없어도’, ‘소지하고 보기만 해도’
이제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기존

유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

소지·시청 처벌 부재

개정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

성폭력특별법 개정 및 규정 신설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 원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물로
협박·강요 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시 처벌

성폭력처벌법 준용

협박
징역
최소 1년

강요
징역
최소 3년

개정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 협박·강요 시 더 강한 처벌규정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규정 신설

협박
징역
최소 3년

강요
징역
최소 5년